

쇄신·통합·미래비전 제시해야 호남민심 얻는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로 여권에 정권재창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과, 영남의 여권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민심 이반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20년 집권론'을 거론하며 여유를 보여왔던 여권에 내년 대선에서 과연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느냐는 화두가 부상한 것이다. 여권은 당·정·청의 대규모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권을 둘러싼 각종 약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여권의 정권재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호남 민심도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이후 각종 선거에서 호남만 정치적 '섬'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창사 69주년을 맞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을 조명해본다.

◇심각한 민심 이반=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오세훈 신임 시장이 57.5%를 득표해 박영선 민주당 후보(39.2%)를 큰 격차로 이겼다. 민주당에 등 돌린 민심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오 시장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보수 표밭으로 불리는 강남 3구는 물론 민주당의 텃밭인 강북북부와 서남권마저도 내줬다. 심지어 박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구로구 표심마저 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형준 후보가 62.67%를 얻어 34.42%를 확보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거의 '다발' 차이로 눌렀다. 박 시장은 부산 16개구에서 압승한 데 이어 한 곳을 빼곤 모두 6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에서도 호남을 제외하곤 아권이 압승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을 향한 혹독한 심판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실정과 각종 불공정 논란, 내로남불의 정치적 오만은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억눌린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 정부·여당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청년층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투표율이 각기 58.2%, 52.7%로 역대급을 기록했다는 점은 정권심판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거센 '정권 심판' 바람에 밀려 인물이나 정책이 전혀 부각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이 바람을 타고 중도층 공략에 성공한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173석의 환상에 빠진 슈퍼 여당의 민심 오독'으로 꼽고 있다. 지난 총선 대승은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 코로나 19라는 국난(國難)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민심 결집 효과였다는 점을 잊었다는 것이다. 이미 부동산, 일자리 문제 등 정책 실패가 있었고 조국 사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오만과 독주를 거듭하다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번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조국 사태 등을 거론하며 '선거 참패의 원인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 있었다'고 밝힌 점을 시사점이 크다.

◇정권재창출 위기 확산=4·7 재보궐선거에서 심각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권은 당·정·청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하지만, 여권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당장,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슈가 심상치 않고 부동산 및 민생 경제 문제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여기에 여당의 지도부 쇄신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도 미지수다.

우선 백신 접종 문제는 폭발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다.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국내 1차 접종률은 2.21%(114만 8060명)에 그쳤다. 초기 물량 확보가 늦어졌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부작용 등으로 접종이 지연된 탓이다. 이런 속도라면 정부가 제시한

- 4·7 재보선 참패 민주당
- 정권재창출 위기감 고조 속
- 혁신 외치며 국면전환 안간힘
- 부동산·백신서 민생경제까지
- 당장 성과 내기 힘들어 고심
- 당 쇄신·혁신의 길도 험로
- 국정대전환 단행이 과제
- 압도적 지지 보선 이긴 야권
- 국민의힘 합류냐 제3지대냐
- 윤석열 대선 행보에 촉각



문재인 후보 20대 대선 광주우체국 앞 유세.

'상반기 안에 1200만명 1차 접종'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남미의 콜롬비아에 이어 3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접종 속도가 느린 국가는 뉴질랜드(1.47%)와 일본(0.82%) 두 나라에 불과하다. 2분기 백신 수급도 불확실하다. 이런 속도라면 국민의 70% 이상이 맞아야 가능하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최악의 경우, 백신 확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내년 대선때까지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는 여권에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부동산과 민생 경제 해법도 쉽지 않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불·탈법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원점인 듯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152건의 의혹과 관련된 6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구체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수사팀 구성과 특검 도입을 두고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설익은 정책을 펼쳤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민생 경제도 쉽지 않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민생 안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맞물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실업 문제 등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여권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또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어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와 함께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쇄신을 이룰지도 미지수다. 당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조국 논쟁'과 '친문 책임론' 등을 놓고 당이 시끄럽다. 또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174석의 거대 정당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도 미지수다. 지도부가 '도로 진문'으로 구성된다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쇄신과 통합 경쟁=일단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로 제기된 '무능과 오만'의 프레임에 쇄신과 결집을 통해 깨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재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재보선 결과만으로 '정권재창출론'이 몰락하고, '정권교체론'이 대세가 됐다고 보기는 선부르다. 민심이 4·7 재보선에서 정권심판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러한 정세가 11개월 뒤 대선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뒤섞이면서 민심은 또 한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여권은 정권심판론을 넘어설 국정대전환을 단행하는 것이 과제다. '무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고, '오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겸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권 심판 정세를 희석시키고, 보수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를 잊지 않은 중도층과 2030세대를 민주당 지지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차기 대선 주자군에서도 여권이 유리한 지형이다. 친문 진영의 현신과 집단 지성을 통한 결집을 통해 '용광로 경선'이 펼쳐진다면 판은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지지세가 견고하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변동성이 큰 점은 이를 방증한다. 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주자로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모을 수 있는 보수 혁신에 나설 것인지도 미지수다.

결국, 내년 대선 키워드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과감한 '쇄신'과 그동안의 분열 정치를 벗어나 중도층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승리가 아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패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어느 진영이 강력한 변화와 쇄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를 주시하며 내년 대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69 창간 69주년
광주일보

Perfect & Pride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한전KPS가 함께 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 밤하늘에 별빛이 전기를 대신했습니다.
그 빛의 소중함을 알기에, 대한민국 전력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고객과 함께 한 37년! 고객과 함께 할 100년!
이제,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한전KPS주식회사

社 창립 제37주년

37th

세상을 밝히는 한전KPS